

# 5G 주파수 추가할당 놓고 “특혜” vs 위배 없다” 갈등 격화

〈SKT·KT〉

〈LGU+〉

과기부 5G 주파수 추가할당 토론회  
SKT·KT “할당조건 부과해야”  
LGU+ “소비자 편익증진 최우선”

정부의 5G 주파수 할당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동통신3사간 논쟁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SK텔레콤과 KT측은 이번 입찰이 LG유플러스의 단독 입찰이 될 가능성이 커 이번 주파수 추가할당은 ‘특혜’라며 할당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0c폭을 추가로 배당받더라도 3사가 모두 동일한 대역폭인 100MHz폭이 돼 공정경쟁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통3사의 주파수 할당 논란은 국회로까지 확산됐다. 국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지난 19일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정책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과기정통부 주최로 진행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계획안’ 공개토론회에서 SKT와 KT는 “이번 할당은 특정



19일 오후 비공개로 진행된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정책 간담회’.

/양정숙 의원실

사업자(LG유플러스)에게 독점 할당될 수 밖에 없다며 불공정하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과기정통부는 이용자편의를 최우선 고려해 추가할당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그러자 양사는 주파수 경매는 진행하더라도 추가 할당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SK텔레콤 이상현 정책혁신실장은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아무리 다른 단추를 잘 정리해서 채워도 결국 잘못된 옷매무새는 남게 된다”며 “이번 주파수 공급구조가 공정한 수 없는 구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공급방식이나 대가를 잘 만들려고 해도 잘못된 구조를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3명의 기준생들이 각각 100점, 100점, 80점을 받아 성적에 따른 부서 배치가 끝난 상황에서, 80점 맞은 사원의 요청에 의

해 그 사원에게만 추가시험 기회를 부여하고 100점을 받게 해 부서 배치를 바꿔버린다면 과연 공정한 조치일 수 있겠는가”라며 “이번 주파수 할당이 불공정하다는 생각을 접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또 “이번 공급되는 주파수는 LGU+ 이외의 사업자들은 이를 취득하더라도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운 대역”이라며 “CA라는 주파수집적기술을 활용하면 된다 하지만, CA 지원 단말기는 빨라야 올해 말이나 가능하고 이 단말기 출시 이전에 나온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SKT와 KT의 고객은 CA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 또 CA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지국 장비를 개발하고 망을 구축하는데 3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SKT와 KT는 3년 이후에나 이 주

파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이번 주파수 할당은 특정 사업자 발 요청에 따른 독점 할당으로 한 사업자만 할당 받는 구조적 특혜 문제가 있다”며 “당사도 할당참여를 검토했으나, 20MHz를 활용하기 위해 수도권 기준 1조 5000억원의 막대한 투자비와 1~2년 구축 기간이 소요되며, 투자 대비 효용성이 현저히 낮아 할당 참여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반면, LGU+는 기 구축·운용 중인 100MHz 폭 기지국 장비를 그대로 활용, 추가 비용 없이 SW 업그레이드만으로 100MHz(80MHz+20MHz) 서비스가 즉시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20MHz폭이 LGU+에게 할당될 경우 정책 발 시장경쟁 구도의 근본적 훼손이 우려된다. 수도권 지역은

LGU+ 장비(64TR) 성능이 당사 국산 장비(32TR) 보다 약 30% 이상 우수한데, 서울의 경우 당사가 주파수 폭, 장비 수량 모두 우위에 있음에도 LGU+ 장비의 우수한 성능으로 속도가 동등한 상황”이라며 “LGU+가 20MHz폭 확보 시 수도권 내에서 5G 속도 1위 등극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 담당 상무는 “이번 주파수 할당은 5G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소비자 편익증진이 최우선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주파수 할당은 투자 활성화로 인한 서비스 경쟁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경쟁사들이 2018년부터 100MHz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LG유플러스는 80MHz폭으로 제공했는데, LG유플러스가 주파수 할당을 받게 되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속도와 균등한 5G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며 “농어촌 5G 공동구축을 통해 도농간 차별 없이 동등한 품질의 5G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도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채윤정 AI전문 기자 echo@metroseoul.co.kr

## 중진공, 中企 구조혁신 앞장... 선순환 기업 생태계 구축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신년간담회  
전국 구조혁신지원센터 10곳 오픈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사업 추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올해 중소기업들의 구조혁신과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한 ESG경영을 적극 지원한다.

기업들의 신산업 전환, 디지털역량 강화, 좌초위기 산업군에 대한 인력 교육 등 ‘구조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0곳에 ‘구조혁신지원센터’를 새로 만든다.

‘탄소중립수준진단 시스템’을 새로 오픈해 기업들이 탄소저감과 공정혁신 개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20일 오전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이 19일 서울 목동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중진공

서울 목동 서울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탄소·디지털 등 산업구조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지에 따라 중소기업과 국가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중진공은 창업부터 혁신성장, 재도전 및 구조혁신 지원을

통해 선순환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수출물류 애로, 인력난 해소를 통해 중소기업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며 ESG경영 지원, 지역산업혁신, 디지털 정책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중진공이 올해 새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사업전환, 디지털전환, 노동전환을 중심으로 한 ‘구조혁신지원사업’이다. 글로벌 팬데믹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산업 구조 변화 과정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겪을 수 있는 구조적 애로를 통합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 이사장은 “구조혁신지원사업으로 진단과 컨설팅을 통해 도출한 계획에 따라 사업전환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노동전환 지원금 등 맞춤형 정책을 안내하고 후속사업을 연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중진공은 이를 위해 지난해 1000억원이던 사업전환자금 예산을 올해엔 250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전국에 있는 기존 33개 사업전환지원센터 가운데 지역별 수요가 많은 10곳을 구조혁신지원센터로 개편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수요발굴→전문가진단→컨설팅→구조혁신지원→재정·금융·세제 등 연계지원→성과분석·목표관리 등 사후관리를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당장 2월 중 경기 수원에 1호 구조혁신지원센터의 문을 연다.

중소·벤처기업들에게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에도 힘쓴다.

기업들의 ESG경영을 위해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해 맞춤형정책을 연계하고, ESG 자가진단 등을 통해 저변을 확산시켜나가는 것이 골자다.

김 이사장은 “중소기업들의 ESG 인식을 높이는 것이 가장 첫번째가 될 것”이라며 “중진공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ESG 준비를 위한 전담반을 앞서 꾸렸고 이를 통해 ‘ESG 자가진단 시스템’을 만들어 매년 5만개의 기업 데이터를 축적, 기업들이 자가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공정별로 에너지사용 현황을 분석해 탄소저감 및 공정혁신 개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탄소중립수준진단’ (그린닥터)이 그것이다. 이를 위한 시스템을 조만간 오픈해 올해 600곳을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그린닥터를 통해 기업별로 로드맵을 수립하면 컨설팅, 시설도입, 자금 등 정책사업도 연계해 지원한다.

탄소저감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넷 제로(Net-Zero)’ 자금도 지난해 200억원에서 올해엔 1200억원까지 6배 늘렸다.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172억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탄소중립 전환 지원을 위해 54억5000만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중기부, 2970억 투입해 지역中企 키운다

기술개발 등 1139개 과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총 2970억원을 투입해 기술개발과 사업화 등 1139개 과제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올해 지역특화산업육성 등 주요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지원기업 및 기관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산업 경쟁력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올해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

역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총 2783억원 규모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올해 ‘위기를 넘어 지역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지역혁신 성장’을 사업목표로 설정해 탄소중립 핵심품목을 우선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육성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술개발 지원과제에 대해 기업의 민간부담금(25→20%)과 현금부담 비중(40→10%)을 각각 완화하고 기술료 납부기

간을 최대 2년 연장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 사업(33억원)도 신설했다. 중기부는 비수도권 5개 시도에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을 위한 센터를 구축해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경기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기징후 단계(양호·주의·심각)를 구분,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한다.

아울러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위기업중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위기지역 확장 기술개발(Scale-up R&D)’도 총 54억원 규모로 단계별 기술개발 150개 과제를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 코로나 악재 뚫은 中企, 수출액 사상 최고

전년보다 16.2% 늘어

코로나19 장기화, 물류대란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일 중소기업부에 따르면 2021년 중소기업 수출액이 1171억 달러를 기록했다. 기존엔 2018년(1052억 달러) 기록이 최고치였다.

아울러 지난해 수출액은 전년도 대비 16.2% 늘어난 것으로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이 1년새 10% 이상 증가한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계다가 월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선 것도 2020년 12월이 처음이었지만 지난해엔 총 6회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에서 많은 기록이 나왔다.

1000만 달러 수출을 달성한 기업도 2294개사로 역대 가장 많았다. 5000만 달러 달성(250개사), 1억 달러 달성기업(66개사)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전체 수출 중소기업 수는 9만2347개사로 전년의 9만4900개사보다 2.7% 줄었다.

/김승호 기자